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허재필 수습간사/ 02-3673-2141)
일자	2017. 4. 6(목)
제목	[보도자료]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정의를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를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2.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과 공약이 밀려난 인물 중심의 낡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 <경실련>은 촉박한 선거기간 안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투표하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공약 검증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 입장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각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우리 사회 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채원호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 김송원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19대 대선에서의 경실련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채원호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후보검증단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서순탁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후보검증단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김송원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윤순철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검증·투표참여캠페인단장
경실련 사무총장

□ 식순

- 개회(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경실련이 제안하는 대선 정책과제 발표
- 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기자회견문)
- 질의 및 응답
- 폐회

□ 경과보고

- 2월 17일(금), 천안에서 개최된 전국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바, 대선에서의 경실련의 역할, 주요 의제, 활동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거쳐서 활동계획을 수립함.
- 3월 27일(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19대 대선 정책기조를 “정의가 시작되는 5월”로 의견을 모으고,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세부 정책과제를 정하고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침.
- 4월 5일(수) [19대 대선 공동대응 사업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활동 기조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와 공약검증에 나서기로 함. 아울러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공명선거고발센터 운영에도 나서기로 함. 경실련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권하기로 함.
- 아울러 유권자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전국경실련 지역협의회를 대선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후보들의 지역공약이 포퓰리즘이나 장밋빛 공약은 아닌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체계적인 공약검증에 나서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는지 감시하기로 함.

[자료 1]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

I. 운동 기조 :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들의 삶이 고통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불공정·불평등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함.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국민들은 다시한번 나라와 미래를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정책선거** :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후보들의 정책과 국정운영 리더십에 대해 철저히 검증.
- **민생선거** : 꿈과 희망을 잃은 서민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주거안정 등 민생정책을 유도하고, 각 후보들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는지 철저히 체계적으로 검증.
- **깨끗한 선거** : 흑색선전, 폭로, 인신공격 등에 매몰되기 보다는 정책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고,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개.

II. 활동 프로그램

1. 정책검증운동

: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각 후보에 각인시키고, 민생중심의 공약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무리한 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검증.

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8대 개혁입법과제 발표(2월1일 완료)

- 대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개혁입법과제 18개를 선정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세월호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선거연령 하향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법 제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재벌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상,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득중심의 건강 보험부과체계 개편,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

② 각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경실련 5대 정책과제 발표(4월6일)

- 5대 분야 30개 개혁과제 및 100대 세부 과제
-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후보간 공약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위한 정보제공

③ 주요 후보자 공약·정책 검증

- 각 정당에게 우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
- 노동·일자리, 복지, 청년, 안전, 교육, 재벌개혁, 소득불평등, 권력기관, 정치개혁, 외교통일안보, 지방분권 등 분야별 공약 검증단의 체계적인 평가서 작성

④ 헛공약, 민생외면 공약 선정 발표

- 20여 지역경실련이 공동으로 포퓰리즘, 실현가능성 등 공약의 문제점 조사

⑤ 주요 후보 정책책임자 초청토론회

- 주요 후보들의 정책 책임자를 초청 심층 토론을 진행
- 각 분야별 전문 패널 구성 및 시민들의 질의 취합

2. 후보자검증운동

: 적폐를 청산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는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위한 정보제공.

① 적폐청산, 양극화·불평등 해소 등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구현할 후보 검증

- 후보자의 도덕성, 공약에 나타난 정책지향, 전문성, 정치발전 기여여부 등 세밀한 평가를 통해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구현할 후보인지 검증.

3. 투표참여운동

: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고, 어느 후보자가 국가발전을 위해 적합한지, 국정운영 리더십은 있는지 심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평가와 캠페인을 전개

①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동원해 공명·정책선거, 후보선택도우미를 홍보함
-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후보선택도우미(Wahl-O-Mat) 프로그램 운영

- 정책적으로 나와 가장 맞는 후보를 골라주는 인터넷사이트 프로그램
- 경실련 사이트에 유권자의 개별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과 후보의 정책 입장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후보를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 운용
- 정책선거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③ 투표참여 캠페인

- 사람동상전 : 5대 정책과제 알리기 및 투표 참여 독려
- 지역경실련 캠페인 지원(토크콘서트, 역·터미널 캠페인 등)

4. 선거부정고발센터운영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부정에 대한 고발센터 운영.

① 선거부정고발센터

- 시민고발센터 운영으로 선거부정 감시활동 전개
-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
 - 대표전화 : 02-3673-2141(정치사법팀) /
 - E-mail : reform@ccej.or.kr

Ⅲ. <유권자운동본부> 조직 구성

- 본 부 장 : 상임집행위원장(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정책공약자검증단장 : 정책위원장(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정치개혁위원장(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부개혁위원장(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재벌·금융개혁위원장(정미화 변호사)
 - 노동개혁위원장(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소기업위원(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재정세제위원장(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농업개혁위원장(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서민주거안정본부장(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국책사업감시단장(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 사회복지위원장(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위원장(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 교육개혁위원장(나병현 교수/교육학)
 - 지방자치위원장(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통일협회 정책위원(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지역본부 및 투표참여 캠페인단장: 김송원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부산/울산	■ 인천	■ 대구	■ 대전/세종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제주		
-
- 선거부정고발센터장 : 김삼수(정치사법팀장)

[자료 2]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정의가 시작되는 5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됐다. ‘국민행복시대’를 외쳤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고, 청산해야 할 수많은 적폐를 드러냈다. 차기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국민들은 다시한번 위대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내몰렸다.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폭증,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35만 명의 실업자,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창궐과 빈부격차 확대 등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스러운 정도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통상압력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줄 충격의 여파는 너무도 크다.

시민들은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개혁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은 거꾸로 좌절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양극화 전이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각 당 후보가 확정됐지만 정책과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은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철저한 인물검증과 국정운영 리더십을 검증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가려낼 수 있도록 하고, 기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생과 반부패, 개혁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촛불시민혁명으로 시작된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후보들은 어떤 철학과 가치에 바탕 해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적폐청산, 민생회복,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

둘째, 국정농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포퓰리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거나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흑색선전, 폭로, 인신공격, 장밋빛 공약 등 후보들의 소모적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경실련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욕구를 담아내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선거를 통해 2017년 5월이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4월 6일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자료 3]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19대 대선 정책과제>

※ 5대 분야 30개 개혁과제 및 100대 세부 과제

※ 세부내용 별첨

I.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경제)

과제	세부과제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특혜 청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순환출자 해소 2. 지주회사제도 개선 3. 황제경영 방지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제도 개선 4. 금산분리 강화 5. 재벌특혜의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인세 정상화 2. 부동산 보유세 강화 3.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4. 주택임대소득의 예외없는 종합과세 실시 5.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 실시 6. 예외없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7. 상속·증여세 무력화시키는 기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3. 노동시장 구조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저임금제도 개선 2. 단계적 기본소득제 도입 3. 비정규직 문제 개선
4. 금융감독체계 개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정책기능 통합과 감독 및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5. 중소기업 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벌의 골목상권진출 제한 및 중소기업상권 보호
6.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2.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3. 징벌적 배상제 도입 4.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품권법 제정
7. 식량주권 확보 및 먹거리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주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2. GMO표시제도 개선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처벌 강화 4. 농가소득 양극화 개선 및 소득향상
8.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기본법 제정

II.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주거/도시/공공건설)

과제	세부과제	
주거	1.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2.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인하 3. 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및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4. 주택 감리대가 예치금제 도입 5. 주택금융의 비소구 대출 확대 6. 주택금융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
	2. 무주택자 주거불안 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주택 확대 및 공영개발 강화 2. 소득 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 확대 3.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
도시	3. 동지내몰림 방지	1. 동지내몰림 방지 및 극복
	4.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분별한 도시계획 용도 및 밀도 상향 방지 2. 재개발·건축 사업추진 요건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건설	5.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와 예산낭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사업의 직접시공제 의무화 확대 2. 공공사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3. 공공사업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종합심사제 폐지 4.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 전면 확대 5. 민간투자사업의 특혜 중단
	6. 철도인프라 통합	1. 철도인프라 통합으로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III. 차별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사회/정보인권)

과제	세부과제
1. 의료복지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3.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4.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5.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2. 아동·청년·노인 등의 복지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2.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청년수당 3.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인보충급여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폐지 5. 국민연금의 최저 및 최고 상한 연금제 도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3.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대학의 공공성 강화위한 네트워크 특성화 강화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3.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간 격차 완화
4. 개인정보보호 강화	1.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2. 개인정보 감독권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IV.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정치/정부)

과제	세부과제
1.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연령 하향 3.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4. 선거운동기간 확대 및 선거운동 제한 개선
2. 투명한 정치위한 정당/정치자금제 개혁	1.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2.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3. 상향식 공천제 법제화
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1. 상시 국정감사 도입 2.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4. 시민참여의 헌법 개정	1. 기본권,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강화
5.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강화의 검찰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2. 검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한 수사체계 개편
6. 법원 개혁	1. 대법관 증원 2. 변호사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선임서 미제출 변론금지
7. 불법행위 근절 위한 국정원 개혁	1. 대공수사권 폐지 2.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8. 미래지향적 정부조직 개편	1.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2. 기획재정부 독주 차단 3. 금융정책 기능의 통합 및 금융감독 분리 4.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관련 부처 개편 5. 부패방지위원회 독립기구로 설치 6. 분권형 정부 조직개편
9. 지역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분권 실현	1. 분권적 헌정구조로의 전환 2. 재정분권(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3. 위임사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주민자치 실질화 5. 교육자치의 실현 6.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
--	---

V.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남북)

과제	세부과제
1.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2.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인도지원 재개
2. 남북교류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성공단 정상화 2.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3. 북한 SOC 시범개발 착수 4.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5. 북한 농업구조 개선 위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2. 남북경제협력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3. 남북 재난공동관리단 구성 4. 철의 실크로드 실현 5.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